

## 실업대책에 대한 정책방향



李 聖 宰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외**

환위기가 발생하기 전 달인 1997년 10월 2.1%이던 실업률이 외환위기후 부도, 폐업,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시장이 극도로 위축되어 1999년 2월에는 8.7%에 도달하였다. 이는 실업률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이다. 다행히도 3월부터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거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많은 실업자들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대한의 고용자원을 동원하여 실업대책을 세우고 있다. 즉, 1998년에 약 10조원, 금년에는 간접 실업대책비를 포함하여 약 16조 5천억원을 투입하여 사회안전망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이 결과 실업가구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마련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은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업대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측면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첫째, 실업대책의 생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대표적 실업대책인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금년 약 2조 5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나 사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 목적 중의 하나가 실업가구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생산성 제고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생산적 복지'를 실현

향후의 실업대책은 임시적인 보완적 실업대책에서  
근본적인 사회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라는 오명을 탈피하는 길이다.

둘째,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를 줄여야 한다. 실업자 중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 즉, 사회안전망의 대상계층(target population)에게 한 가지 이상의 실업대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실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즉, 긴급식품권, 긴급의료권 등의 긴급구호제도의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근본적인 사회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치유중심의 대중요법으로는 향후 지속될 고실업을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의 실업대책은 임시적인 보완적 실업대책에서 근본적인 사회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수혜 대상계층간의 형평성 제고에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하여야 한다. 금년의 경우 가장 열악한 계층인 193만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생업자금융자금은 350억원에 불과한 반면에 163만 실업자에게 제공되는 실직자 대부사업은 1조 1천억을 넘고 있다. 또한 실직자대부사업은 보증인 문제로 저소득층 실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실업자가 더 많은 대부를 받는 소득역진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분배적 정의의 실현에 보다 많은 배려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실업대책의 양대 축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고용창출간의 연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실업자가 170만명을 넘고 있으나 일부 3D업종에서는 10만명 이상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은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수요와 부정합(mismatching)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특별연장급여, 개인연장급여 등은 3D업종 취업과 연계 또는 조건부 급여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실업대책이 부처마다, 프로그램마다 다른 전달체계를 지니고 있어 실업자에 대한 One-stop서비스가 불가능하여 열악한 재원의 중복수혜, 부적절한 대상자의 선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달체계의 기능적 재편 또는 조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과학적이고 예측가능한 실업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 실업자의 계층 및 복지욕구 분석없이 집행된다면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실업대책예산에 기초자료 수집예산을 계상하고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실업대책으로 실업으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업대책은 국가의 발전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제공하여야 한다. **끝!**